

글로벌 혼합금융 확대 움직임과 시사점

2025. 6. 30.

- **글로벌 혼합금융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19년 \$71억 → 24년 \$150억)**
 -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은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을 결합하여 수원국(주로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등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금융을 의미
- **글로벌 혼합금융 확대에는 ①딜(Deal)의 대형화, ②기후대응 주류화, ③민간은행 영향력 확대, ④수원지역 다변화의 4가지 트렌드가 크게 기여**
 - **[딜의 대형화]** 시장 초기 파일럿 성격의 다수소규모 거래에서 벗어나, 시장참여자들의 양질·대규모 프로젝트 선별 역량이 높아지면서 혼합금융 건수는 줄었으나 평균 딜 사이즈가 대폭 확대
 - **[기후대응 주류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기후대응 지원 목적의 혼합금융이 급증
 - **[민간은행 영향력 확대]** 혼합금융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현지 영업경험, 네트워크 구축 등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한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참여가 확대
 - **[수원지역 다변화]** 아프리카로 편중되어있던 수원지역이 20년대 이후 빠르게 다변화
-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단순 재무적 투자에서 나아가 플랫폼 설립, 신규 금융방식 내재화 등 적극적인 형태로 혼합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모습**
 - **[日 MUFG의 GAIA 플랫폼]** MUFG는 글로벌 혼합금융 No.1 금융회사로서 축적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플레이어의 참여를 독려하는 혼합금융 플랫폼 GAIA를 설립
 - **[美 BoA의 DFNS]** BoA는 수원국이 자금의 일부는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를 자연보호 등 기후대응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혼합금융 방식인 Debt-For-Nature Swap(DFNS)를 활용하여 가봉(23년), 에콰도르(24년) 대상 트랙레코드를 축적
- **국내 금융회사의 혼합금융 사례는 아직 드물지만, 최근 관련 기회가 확대되는 중**
 - 기재부-UNFCCC-GGGI 공동으로 민간 주도형 GVCM(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추진 중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투자자의 해외 탄소감축 사업 투자(혼합금융)를 유도할 계획
- **앞으로 글로벌 혼합금융 시장에서 국내 금융그룹들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개도국의 고성장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
 - 재무적 성과 외에도 혼합금융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노하우나 네트워크가 현지 영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

작성자: 금융혁신연구실 신동림 책임연구원 (02.2173.0565)



목 차



I. 글로벌 혼합금융의 성장 배경과 동향	1
II. 글로벌 혼합금융의 최근 트렌드	2
III. 글로벌 은행의 혼합금융 Best Practice 분석	6
IV. 국내 현황과 시사점	10
[붙임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요	12
[붙임 2] 기후대응 삼중고의 개념과 완화방안	13
[붙임 3] 기재부, UNFCCC, GGGI간 GVCN 구축 관련 MOU 개요	14

I. 글로벌 혼합금융의 성장 배경과 동향

■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이란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을 결합하여 수원국(受援國: 원조를 받는 나라로, 주로 개도국이 해당)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등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

- 공적자금기관¹⁾은 투자재원 부담을 완화(leveraging)하고, 민간 투자자의 경우 리스크를 경감(de-risking)할 수 있어 상호보완이 가능
 - 투자손실 발생 시 공적자금에서 우선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혼합금융은 수원국의 정치·제도적 변화 등에 따른 민간 투자자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
- 혼합금융의 개념은 2000년대 초에 처음 등장*했으나, 프로젝트 리스크 측정의 어려움, 민간부문의 인식·경험 부족 등으로 한동안 더딘 성장세를 보여왔음
 - * 국제금융공사(IFC, 세계은행 산하),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등 공적자금기관이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보증, 기술·지식 등을 제공하면서 개념화
 - 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붙임1] 참조)가 공식 채택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gap(연간 2.5~3조 달러로 추정)을 줄이는 대안으로 혼합금융이 주목받기 시작

■ 최근들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에 힘입어 혼합금융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 24년 글로벌 혼합금융 결성액 규모는 150억 달러로 19년(71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고, 같은 기간 민간 참여 비중도 36.6%에서 46.0%로 대폭 상승
 - 20년 이후 전세계적 탄소중립 선언 확산, 코로나19, 러-우 전쟁 발발 등으로 대규모 혼합금융 기회가 확대된 것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장참여자(공적자금기관, 민간 투자자* 등)들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에 주로 기인
 - * 특히 민간 금융회사들이 혼합금융을 단순히 재무성과를 제고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현지 사업경험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동

1) 공적자금(기관) 유형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미국 DFC(Development Financial Corporation), FinDev Canada 등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의 유형이 존재

자금원별 글로벌 혼합금융 결성액¹⁾ 연간 추이(2019~2024년)

(단위: 십억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CAGR(19~24)
민간	2.6	3.1	4.8	3.8	7.1	6.9	21.6%
공공	4.5	4.6	6.4	6.2	7.5	8.1	12.5%
ODA	1.2	1.4	1.9	2.0	1.6	3.0	20.1%
계	7.1	7.7	11.2	10.0	14.6	15.0	16.1%
민간 비중	36.6%	40.3%	42.9%	38.0%	48.6%	46.0%	9.4%p

주1) 보증(guarantee), 보험(insurance) 등 간접방식의 금융지원은 제외
 자료: Convergence²⁾,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 글로벌 혼합금융의 최근 트렌드

- 최근 글로벌 혼합금융 시장은 ① 딜(deal)의 대형화, ② 기후대응 주류화, ③ 민간은행 영향력 확대, ④ 수원지역 다변화라는 특징이 강화되면서 시장 성장 유인으로 작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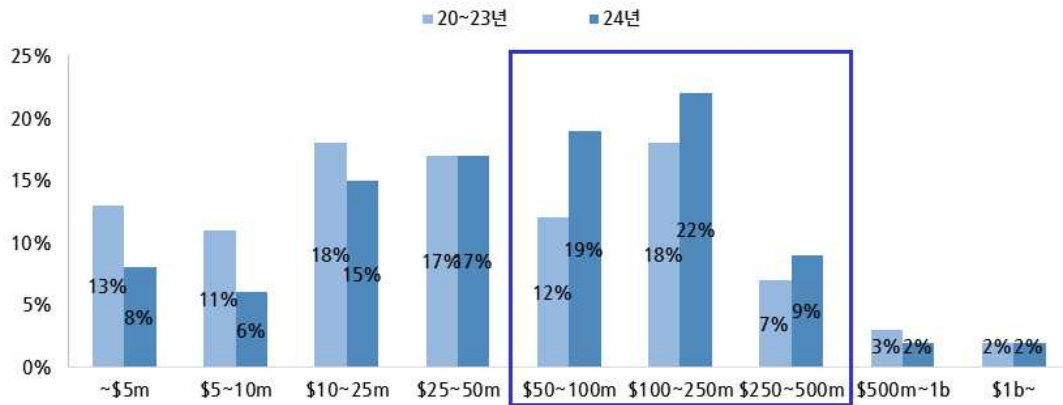
1. 대형화

- 혼합금융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딜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확대를 견인
- 24년 신규 혼합금융 건수는 123건으로 직전 4개년(20~23년) 평균(137건) 대비 10% 줄었으나, 건당 평균 결성액*은 같은 기간 0.79억 달러에서 1.22억 달러로 크게 증가
 - * 중간값(median)도 0.38억 달러에서 0.65억 달러로 급증
 - 특히 24년 들어 중대형 딜(5000만~5억 달러 규모) 비율(건수 기준)은 24년 50%로 이전 대비 13%p나 확대
 -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초대형 딜을 의미하는 'Whale Deal'의 경우, 건수로는 2~3%, 결성액 기준으로는 25% 내외 수준을 꾸준히 유지 중
 - * 지난해 캐나다 브룩필드(Brookfield) 자산운용이 결성한 청정에너지 전환 관련 펀드인 Catalytic Transition Fund가 UAE Alterra 펀드의 지원(10억 달러)을 계기로 캐나다 연기금 CDPQ, 싱가포르 국부펀드(GIC, 테마섹), 프루덴셜 등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대규모 조달(34억 달러)에 성공

2) Convergence는 개도국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혼합금융 데이터, 정보, 거래 동향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MDB, DFI, 상업은행, 자선단체 등 194개의 회원기관으로 구성

- 시장 초기 파일럿 성격의 다수·소규모 거래 패턴에서 벗어나 대형화 추세가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양질의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선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참여자들의 역량이 높아진 영향으로 판단됨

결성액 규모별 혼합금융 비중 추이(24년 vs. 20~23년)



주: 파란 네모박스는 5000만~5억 달러 구간

자료: Convergenc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 기후대응 주류화

■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 확산 이후(21년~) 기후대응 지원 목적의 혼합금융이 급증

- 기후대응 관련 결성액 비중(금액 기준)은 54.7%(14~20년 평균)에서 70.2%(21~24년)로 15.5%p 상승
 - 건수 기준으로도 같은기간 39.0건에서 71.8건으로 2배 가까이 확대
- 기후대응 유형*별로는 완화(mitigation) 분야가 대부분(66%)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응(adaptation)과 완화부문이 결합된 혼합형(cross-cutting) 25%, 적응 9% 순
 - * 기후대응 유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완화’ (예: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탄소포집 등)와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적응’ (예: 홍수 방지 인프라, 기후 스마트 농업 등)으로 크게 구분
- 기후대응 유형별 혼합금융 금액(최근 4년간 평균) 완화 85억 달러, 혼합(완화+적응) 33억 달러, 적응 12억 달러 순
 - * 20년 이전 대비 완화분야가 가장 크게 증가(+24억 달러: 61억→85억)하였고, 이어 혼합(완화+적응)(+12억 달러: 21억→33억), 적응(+7억 달러: 5억→12억) 순

- 유형간 성장성의 차이는 주로 민간부문의 참여 수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 공공 대비 민간자본 배수인 레버리지배율이 완화(3.6배), 완화·적응 혼합(2.8배), 적응(2.1배) 순으로 나타남(21년 이후 기준)
 - 완화부문의 경우 전력판매(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절감(에너지 효율화) 등 사업 성과 및 수익 창출 구조가 비교적 명확해 민간 투자가 집중되는 특징
 - * 반면 적응부문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명확한 성과 측정 및 수익 창출 구조 파악이 어렵고 만기가 긴 특성상 민간부문의 관심·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
 - 따라서 적응부문의 경우 공적자금기관과 디벨로퍼(사업 개발자)들은 혼합형(완화+적응)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향
 - * 23년 브라질 개발은행(BNDES,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Social)과 현지 디벨로퍼인 Aegea은 31억 달러 규모 상·하수도 프로젝트(적응부문)를 개발하면서 정수시설 현대화를 통한 전력 소비 절감 및 탄소감축 효과(완화부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완화’와 ‘적응’을 결합
- IMF(2023)는 공공부문만으로는 ▲기후목표, ▲재정안정,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기후대응 삼중고(climate trilemma)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혼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 상세 내용은 [붙임2] 참조)

3. 민간은행 영향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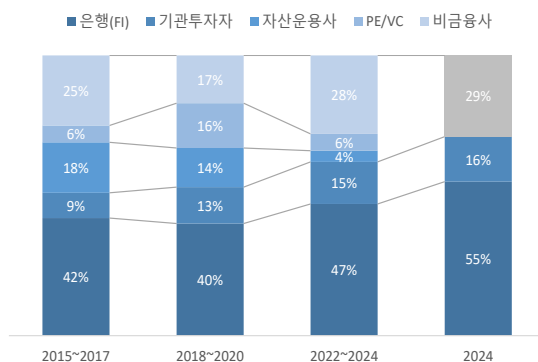
- 글로벌 대형은행(Financial institution)의 참여 활성화로 혼합금융 시장 내 민간 부문의 비중도 꾸준히 확대
 - 민간은행의 연간 혼합금융 공급 규모가 급증(22년 17억 달러 → 24년 38억 달러)하면서 같은 기간 민간부문 내 은행의 비중*(약정액 기준)도 45%에서 55%로 대폭 상승
 - * 15~17년 42% → 18~20년 40% → 22년 45% → 24년 55%
 -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경우 전통적인 혼합금융 방식 외에도 공적자금기관의 리스크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자체 자금만을 활용) 직접 투자(32%)나 온렌딩*(26%) 등의 형태로도 혼합금융**에 참여
 - * 온렌딩(on-lending)이란 특정 목적(예: 현지 중소기업 저탄소 전환,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글로벌 대형은행이 현지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 ** 넓은 의미에서는 공적자금기관의 리스크 부담 없이 단독 추진하는 경우도 ‘혼합금융’ 범주에 포함시킴

4. 수원지역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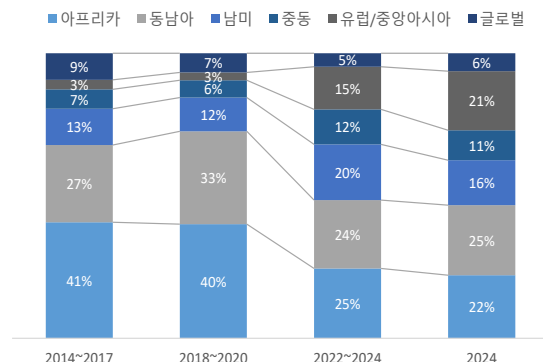
■ 20년대 이후 이전까지 아프리카에 편중되어있던 수원지역이 빠르게 다변화

- 20년까지만 해도 40%를 상회했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비중은 25%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유럽·중양아시아와 중동, 남미의 비중은 큰 폭 상승
 -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원비중 축소는 22년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전쟁의 여파로 유럽·중양아시아(14~17년 3% → 24년 21%) 및 중동(7% → 11%) 지역 재건 지원이 급증했기 때문
- * 24년 중 우크라이나 대상 혼합금융 규모는 16건(13.0%), 22억 달러(14.6%)로 최대 수원국으로 부상
- 아프리카와 아시아 모두 비중이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선방(24년 기준 최대 수원지역, 비중 25%)한 것은 성장세가 높은 '완화부문' 프로젝트의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
- * 탄소배출량이 적은 아프리카의 경우 완화부문보다 적응부문 관련 프로젝트 기회가 많은 반면, 동남아는 제조업 중심의 탄소다배출 지역이라는 특성 상 비교적 완화부문의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차이

유형별 민간 투자자 비중 추이



지역별 혼합금융 수원 비중 추이



주: 21년은 데이터 미확보, 24년은 운용사, PE/VC, 비금융사별 상세비율 정보가 부재하여 합계치로 대체
 자료: Convergenc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II. 글로벌 은행의 혼합금융 Best Practice 분석

- 앞서 언급한 최근 트렌드(대형 딜, 기후대응 주류화, 민간은행 영향력 확대 등)에 부합하는
① 일본 MUFG의 GAIA 플랫폼, ② 미국 BoA의 DFNS Scheme의 사례를 상세 분석

1. 일본 MUFG의 GAIA 플랫폼

- MUFG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25개 기후변화 취약 개도국*을 지원하는 혼합금융 프로젝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3년 GAIA 플랫폼을 구축

- * (동남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고 등 (아프리카) 베냉, 코트디부아르, 가나, 모리셔스, 모로코, 토고, 탄자니아 등 (중남미) 바베이도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자메이카, 케냐, 파나마, 페루 등
- GAIA의 목표 결성액은 14.8억 달러, 예상 투자기간은 15~30년(민간 15년, 공공 30년)으로 상대적으로 민간부문 투자가 저조한 적응부문에 70%, 나머지는 완화부문에 공급할 계획
- * 구체적으로는 생태계 서비스 25%, 인프라 25%, 식량·물 안보 20%(이상 적응), 발전 15%, 수송 저탄소화 15% 내외(이상 완화)

- GAIA 구축 시 MUFG는 글로벌 혼합금융 No.1 금융회사*로서 축적한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십분 활용

- * MUFG는 2018년 이후 혼합금융 민간 투자자 League Table에서 1~3위 안에 포함되었으며, 7년 연속 Top 7에 포함된 금융회사는 MUFG, SMFG, Societe Generale 3곳에 불과

글로벌 혼합금융 시장내 민간 투자자 League Table(2018~2024년)

순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	Standard Chartered	Standard Chartered	Societe Generale	MUFG	SMFG	MUFG	SMFG
2	MUFG	Societe Generale	MUFG	Standard Chartered	MUFG	SMFG	MUFG
3	Societe Generale	MUFG	Standard Chartered	AXA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BNP Paribas
4	SMFG	SMFG	Deutsche Bank	Societe Generale	Societe Generale	BNP Paribas	Banco Santander
5	Credit Agricole	Deutsche Bank	Accel Partners	SMFG	Standard Chartered	Nuveen	Citigroup
6	JPMC	Mizuho	BNP Paribas	BoA	Rabobank	Rabobank	Societe Generale
7	Mizuho	Credit Agricole	SMFG	Credit Agricole	AXA	Banco Santander	Axis Bank

주: 순위는 직전 5년간 혼합금융 참여 건수 기준
자료: Convergenc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MUFG는 플랫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트랙레코드 기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기구, MDB/DFI, 국영·민간 상업은행, NGO 등 다양한 기관들을 협업기관으로 편입

GAIA 내 주요 파트너 기관

구분	기관명
국제기구	UNDP, UNEP, IFAD, NDC Partnership, GGGI 등
MDB	ADB, AfDB, CAF, CABEL, BOAD 등
DFI	FinDev Canada, DBP, PT SMI, SIDBI, TBD 등
국영·민간 상업은행	Landbank, Banco Nacional, Invest Barbados, XacBank 등
NGO	C40 Cities, WaterAid, R20, Fundación Avina 등

주: Bold는 MUFG가 GAIA 내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선정한 기관(Key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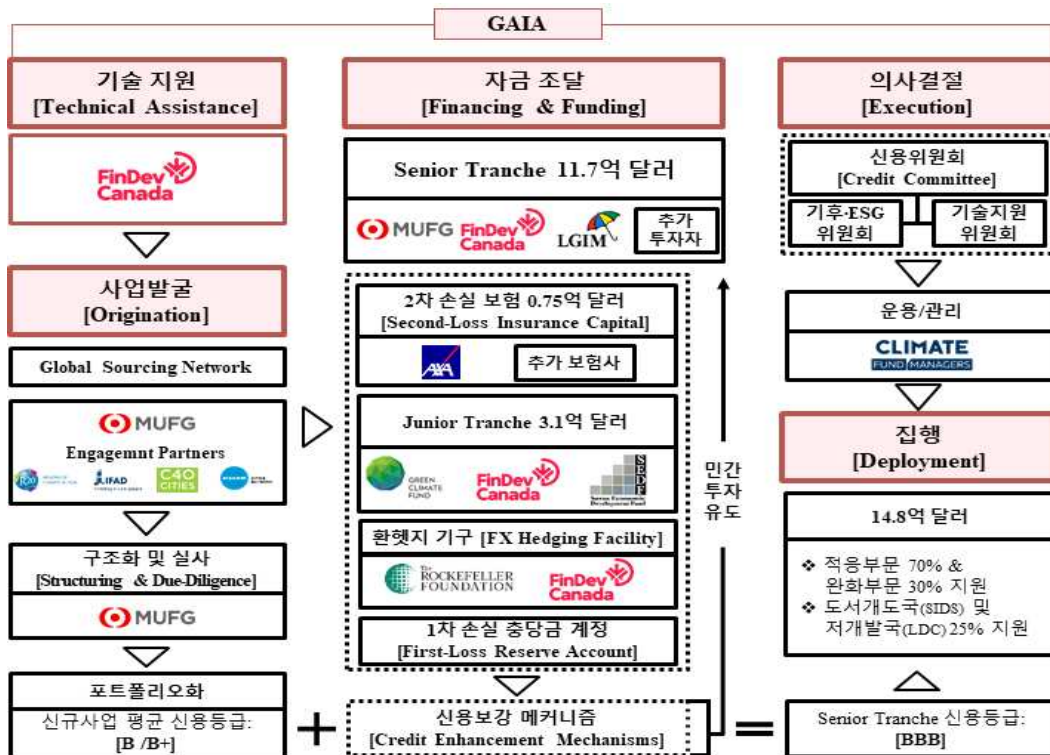
자료: MUFG, GCF(Green Climate Fund),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MUFG는 GAIA 플랫폼 상에서 투자자(financing)뿐 아니라 사업발굴(origination), 구조화(structuring), 자금조달(funding), 의사결정(execution) 등 전체 혼합금융 추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 공적자금기관 또는 디벨로퍼가 사업개발·구조화·모니터링을 주도하고 민간은 재무적으로만 관여(투자 및 이익 수취)하는 기존의 혼합금융 모델과 차별화
- [신규 사업발굴] MUFG의 자체 글로벌 네트워크(현지법인·지점 등) 파트너 기관(국제기구, NGO)의 프로젝트 소싱 역량을 적극 활용
 - 발굴한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MUFG가 직접 실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식별하고 금융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조화
 - * 단, 실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기술은 FinDev Canada 등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받음
- [자금조달] MUFG는 파트너 기관 및 외부 민간 투자자 대상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2.95억 달러 규모의 자체 재원을 GAIA에 투자(senior tranche)하는 ‘앵커 투자자’ 역할도 수행
 - 투자재원은 크게 민간투자 중심의 Senior tranche(선순위)와 공적자금 중심의 Junior tranche(후순위)로 구성되며, 손실 발생 시 Junior tranche에서 손실분을 우선 충당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 GAIA의 목표결성액 14.8억 달러 중 Senior Tranche로 11.7억, Junior Tranche로 3.1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
- [의사결정] MUFG를 포함한 senior tranche 투자자들의 투표를 통해 사업 건별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신용위원회를 GAIA 내에 설치

- 신용위원회는 산하에 사전검토된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의견을 제시하는 기후·ESG위원회와 신규 사업기획에 대한 검토 여부(예상 비용·효과 등)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기술지원위원회를 운영

GAIA 구조도



자료: MUFG, GCF,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MUFG는 GAIA 구축 시 민간 주도 플랫폼이 신용보강 등 신뢰도 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리스크 완충장치 마련에 주력

- Junior Tranche 외에도 손실 총당금(First-loss reserve account), 2차 손실 보험(Second-loss insurance capital), 환헷지 기구(FX hedging facility) 등 다양하고 다층적인 손실흡수 메커니즘을 도입
- 사업 손실은 손실 총당금 → Junior Tranche → 2차 손실 보험 순으로 흡수되며, 개도국 사업 추진에 따른 환율리스크는 환헷지 기구를 통해 완화시키는 구조
- * 2차 손실 보험의 경우 글로벌 보험사 AXA가 5천만 달러 규모의 보험금을 지원
- 플랫폼 내 강력한 신용보강 메커니즘(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실제 민간 투자자에 적용(senior tranche)되는 신용등급(BBB)은 초기 발굴한 단계에서의 신용등급(B-/B+)보다 높은 수준

2. BoA: DFNS(Debt-For-Nature Swap)

■ DFNS는 조달한 자금의 일부는 수원국의 부채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를 자연보호 등 기후대응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혼합금융 방식

- 금융회사가 MDB·DFI 등의 보증 등을 통해 신용이 보강된 녹색·청색 대출·채권발행*을 주관하여 투자금을 유치

* 녹색은 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한 사업, 청색은 해양 환경 개선에 특화된 사업을 의미

- 수원국 입장에서는 신용보강 효과로 리파이낸싱 이후 상환이율이 이전대비 낮아지게 되는 이점을 향유 가능

- 최초의 DFNS 사례는 21년 Credit Suisse(현 UBS)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 대상 1.1억 달러를 제공한 거래로, 이후 바베이도스(중남미, 22년), 에콰도르(중남미, 23년), 가봉(아프리카, 23년)에도 적용된 바 있음

* 글로벌 DFNS 시장규모는 21년 1.1억 달러, 22년 2.1억 달러에서 23년 21억 달러로 급증

- 23년 COP28에서 8개 국제기구 및 공적자금기관들이 DFNS를 포함한 신규 혼합금융 기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합체를 출범시키는 등 공공부문의 노력도 강화되는 중

*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AFD), Asian Development Bank(ADB), African Development Bank(AfDB), European Investment Bank(EIB), Green Climate Fund(GCF), Global Environment Facility(GEF),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DFC)

■ BoA는 23년 미국 금융회사 중 최초로 가봉 정부와 5억 달러 규모의 DFNS를 체결

- 청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5억 달러를 가봉 정부에 대출 형태로 제공하고, 가봉 정부는 기존 국채 상환(3.75억 달러) 및 해양생태계 보전(1.25억 달러)에 활용

- BoA는 거래 구조화 및 주관사(청색채권 발행) 역할을 수행하는 댓가로 구조화·인수 수수료를 수취

- DFNS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미국 DFC가 가봉의 정치적 리스크* 관련 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기존 가봉 국채 대비 신용등급이 대폭 상향(Caa1 → Aa2)되면서 채권금리(가봉 조달비용)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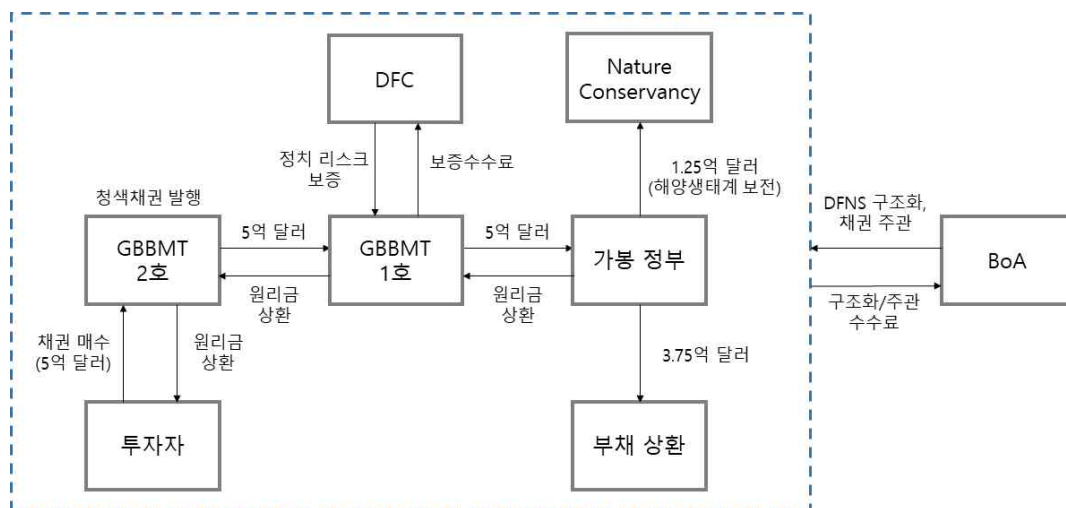
* 당시 가봉은 56년간의 장기집권 체제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23.8월)한 등 정치적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음

- 가봉 정부는 미국 DFC 보증으로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된 자금을 기존 국채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매년 약 700만 달러의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

* 신규 발행한 청색채권의 금리는 6.097%로 기존 가봉국채 대비 4%p 낮은 수준

-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은 글로벌 자연보호 특화 NGO인 Nature Conservancy가 수행
- BoA는 가봉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동일한 scheme*을 적용해 24년에는 에콰도르 대상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DFNS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가는 중
- * 미국 DFC와 Nature Conservancy가 공동 참여

BoA의 가봉 DFNS 사례 구조도



주: GBBMT(Gabon Blue Bond Master Trust)는 가봉 정부에 대한 대출(1호)과 채권발행(2호)을 위한 특수목적 신탁체(SPV)로, 정치적 리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2개(대출/채권발행)로 분리하여 설계. 가봉 정부와의 직접 계약 및 정치 등 리스크 노출은 Series 1에 집중되며, Series 2의 투자자들은 DFC의 정치적 리스크 보증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이 보장된 채권에 투자

자료: GFANZ(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넷제로금융연합), 우리금융경영연구소

IV. 국내 현황과 시사점

■ 국내 민간 금융회사의 혼합금융 사례는 전무한 수준이나, 최근 들어 관련 기회가 확대되는 중

- (정부) 기재부는 24년부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공동으로 28년 완료를 목표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М) 구축을 추진 중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투자자의 해외 탄소감축 투자(혼합금융)를 유도할 계획

* GVCМ(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이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뢰도 부족 등 기존의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탄소시장을 의미

- 25.5월 삼자 간 MOU 체결을 통해 기재부는 민간의 해외사업을 통한 크레딧 창출 지원과 국가간 효율적인 크레딧 이전 체계 구축, UNFCCC는 공신력 있는 GVCМ 기준 마련, GGGI는 합리적인 크레딧 발행 측면에서 협력하기로 발표(※ 상세 MOU 내용은 [붙임3] 참조)
- * GVCМ의 개념, 현황, 필요성, 추진방향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후금융포털](#)에서 발간한 『[GVCМ 필요성과 추진방향](#)』 보고서(25.4.30일)를 참조
- (민간) 22.12월 신한금융그룹이 베트남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GFANZ(넷제로금융연합) 워킹그룹에 창립멤버*로 참여
 - * BoA, Citi, 도이치방크, HSBC, 스탠다드차타드, 푸르덴셜, MUFG, SMBC, 미즈호, 맥쿼리, 신한금융그룹
- GFANZ 워킹그룹은 국가간 이니셔티브인 JETP*와 협력해 민간부문의 혼합금융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개도국 제도 개선 제언 등을 수행
- *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공정전환파트너십)는 선진국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간 네트워크

■ 앞으로 글로벌 혼합금융 시장에서 국내 금융그룹들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개도국의 고성장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

- 재무적 성과 외에도 혼합금융 참여를 통해 얻은 노하우나 네트워크가 현지 영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
- 동남아·중동 등 탄소중립 선언 및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 국가에서 에너지·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 GVCМ 시범사업에 참여, 글로벌 선도금융회사(MUFG, BOA 등)와의 협업/공동투자 등을 통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확보·강화

붙임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요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30년까지 전세계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로, 15년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합의

UN SDGs 주요 내용

구 분	목 표	개 념
1	빈곤 종식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
2	기아 해결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3	건강과 복지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 웰빙(well-being) 증진
4	양질의 교육	포용적·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5	성평등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여아의 능력발휘 지원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에게 물과 위생설비 사용 보장,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모두에게 적당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 혁신 장려
10	불평등 해소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 보장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방식을 보장
13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시행
14	해양생태계	대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사용
15	육상생태계	육상생태계 보호·복원·증진,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생물다양성 보전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력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조체계 활성화

자료: UN,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2 기후대응 삼중고의 개념과 완화방안

■ 국가 차원의 기후금융 비활성화 요인은 ▲기후목표, ▲재정안정, ▲정책적 수용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기후대응 트릴레마(Climate Trilemma)”

- [기후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2°C 이하로 억제
- [재정안정]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 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
 -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세계 국가채무 상승 폭을 최저 수준(GDP 대비 12%p)으로 가정하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을 2050년까지 최대 240\$/tCO₂e까지 높여야 함(IMF 추정)
- [정책적 수용성: 탄소가격] 민간에 비용을 전가하는 탄소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설정
 - * 탄소가격을 75\$/tCO₂e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후목표를 달성하려면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2050년까지 50%p 급증할 것으로 전망(IMF 추정)

■ 공공부문에 더하여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동반 확대가 중요하나 만기불일치, 가치평가의 어려움, 수익성 제약 등 다양한 애로요인이 산재

- [만기불일치] 기후 관련 사업/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장기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나 민간 금융회사의 만기변환기능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움
- [가치평가 어려움] 탄소감축 프로젝트는 기간이 길어 신뢰성·수익성 등 판단*이 어렵고, 수익실현을 위한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이 크며, 감축기술에 대한 사전 평가도 어려움
 - * 투자·프로젝트의 신뢰성이나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관들은 존재하나 해당 기관 참여 시 수수료 지급 등의 비용증가로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
- (수익성 제약) 기후금융(특히 적응부문)의 수익성은 다른 금융기회에 비해 저조한 편

■ 민간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재정지원 강화, 기후공시 의무화, 혼합금융 확대, 배출권거래제 합리화, 녹색금융기관 설립 등이 제시됨

[민간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재정지원 강화	· 이차보전, 보증, 세제혜택, 보조금 등
기후공시 의무화	· 기후공시 의무화 및 위험·기회요인 식별 역량 내재화 등
혼합금융 확대	· 정부와 민간이 프로젝트 위험·수익을 분담하여 불확실성 완화
배출권거래제 합리화	· 유상할당 비율 확대, 할당량 합리화, 파생시장 구축 등
녹색금융기관 구축	· 기후 관련 정책금융 전략 수립 등 총괄 기능 수행기관 설립

자료: IMF, G20 Green Finance Study Group,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3 기재부, UNFCCC, GGGI간 GVCМ 구축 관련 MOU 개요

- 기재부는 24.11월 UNFCCC와 GVCМ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의향서(LOI)에 서명한 데 이어, 25.5월 UNFCCC 및 GGGI와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규정한 MOU를 체결
- [기재부-UNFCCC MOU 주요 사항]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GVCМ 모델 구축에 협력
 - 구체적으로 ▲탄소크레딧 발행 모델 개발, ▲탄소크레딧 국제 거래 촉진 방안 마련, ▲개도국 역량 개발 방안 구축, ▲민간투자 활용 방안 등에서 협력할 예정
 - GVCМ은 양국 간 합의 방식이 아닌 다자간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탄소시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
 - 이러한 다자 체계가 가능하도록 파리협정 6조에 부합하는 방식의 크레딧 방법론 및 MRV(측정·보고·검증) 방식을 개발할 방침
 - 초기 시범사업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한 개도국의 탄소시장 참여 역량 강화도 지원
- [기재부-GGGI MOU 주요 사항] GVCМ 세부 운영 방안 마련에 협력
 - ▲GVCМ 방법론 및 MRV 방식 관리, ▲감축사업 등록 관리, ▲크레딧 발행, ▲시장 참여자 역량 강화, ▲시범사업 실시, ▲사업의 무결성·신뢰성 감독 등에서 협력할 예정
 - GVCМ 관련 협력에서 나아가 ▲녹색성장·기후금융 분야 글로벌 선도 이니셔티브 개발, ▲GGGI 회원국의 기후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술·정책 활용 방안 마련도 공동 추진
- 금번 MOU 체결을 통해 기재부는 민간 주도형 GVCМ을 구축할 계획
 - 민간 주도형 GVCМ은 ①민간이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창출한 탄소감축 실적을 ②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③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크레딧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④다자 체계로 운영되는 ⑤글로벌 탄소시장을 의미

[기재부의 GVCМ 구상안]

구성 요소	주요 내용
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창출	· 민간이 해외사업을 진행하여 크레딧을 창출, 정부는 크레딧 시장 기반 조성
② 공신력 있는 기준	· UNFCCC와 협력하여 MRV, 방법론 등 크레딧 발행에 필요한 기준 마련
③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크레딧 발행	·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기관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크레딧을 발행하여 시장의 공신력·효율성을 확보
④ 다자 체계	·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자체계 구축
⑤ 민간도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거래	· 국가 간 이전에서 나아가 국적이 다른 민간 간 거래도 포함하는 시장을 구축하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 * 파리협정은 '국가간' 감축분 이전만 규정하며 민간 거래는 규정대상이 아님

자료: 기획재정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